

정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정책 제언*

심 재 학 (KDI 경제교육실장)

1. 서 론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은 과거에 비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민간 부문의 경제교육은 잠재적 경제교육 수요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요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일회성 혹은 단편적 교육이어서 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교육 공급 기관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제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중소 도시나 도서 지역 등 경제교육 소외 및 사각 지대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경제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경제교육 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 및 인력의 뒷받침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추진 현황과 해외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경제교육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경제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 본 원고는 2015년도 한국경제학회와 자유와창의교육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2015. 10. 21(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이 원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받아 KDI(심재학 외)가 수행한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과 향후 추진 전략'(2015. 5.)의 내용을 기재부 동의하에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경제교육 현황

1) 시대별 경제교육 추진 현황

<1980년대 경제교육>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즉, 고속성장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으로 한국경제는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79년 4월에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경제안정화시책’은 개발연대에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추곡수매가 동결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긴축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동안의 성장 위주 발전전략에서 개방화·자율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안정 위주 발전전략으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동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1980년 말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물론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추진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제교육은 물론 TV 등 과급력이 큰 방송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을 위해 1981년 2월에 경제기획원 내에 ‘대국민경제홍보기획단’을 발족시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형태의 경제교육을 전담시켰다. 대국민경제홍보기획단은 1982년 ‘경제교육기획관’으로 정식 조직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경제기획원 내 ‘경제교육관실’이 신설되었다. 1984년 8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8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간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다. 1989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기획관을 경제교육기획국으로 개편하여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경제교육기획국은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1994년에 과단위로 축소되었다.¹⁾

<1990년대 경제교육>

1990년대에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참여가 확대되어 정부와 민간이 경제

1) 박용성·김진영, 「경제교육 주관기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2.

교육을 분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1989년에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설립하여 경제교육을 체계화시켜 나갔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1991년에 KDI와 통합된 후 ‘국민경제교육연구소’로 재편되어 경제 교과서 편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사업, 공무원·교사 경제연수 실시 등 실질적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1994년에는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의 주도로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설립되어 경제교육의 학문적 체계성을 높였으며, 재정경제부 내 ‘경제교육홍보기획단’이 설치되어 공공부문의 경제교육을 이끌었다. 경제교육홍보기획단은 이후 폐지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제교육 강화 차원에서 다시 부활되었다.

<2000년대 경제교육>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3년)와 재정경제부 주도로 13개 민간기관이 참여한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2004년)가 창설되면서 민간기관을 통한 경제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에는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산하에 경제교육홍보팀이 설치되었으며, 2006년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의 참여 기관을 18개로 확대하면서 ‘경제교육협의회’로 개편했다.

정부는 2009년 2월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했다.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지원하기로 하고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지정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한국경제교육협회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의 경제교육 체계성을 확보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2010년 이후 경제교육>

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를 통해 경제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경제교육 실시 기관 간 역할을 조정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14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경제신문 발행 및 배포’, ‘경제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박람회’, ‘표준프로그램 및 표준교재 제작’ 등 경제교육 사업을 주도했다. 2010년에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역경제교육센터, 한국경제교육협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KDI 등이 참가한 제1회 경제교육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체계성을 한층 높였다.

2) 정부의 경제교육 추진체계

정부는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했다(2009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교육지원법에는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주관기관을 통해 경제교육을 지원했다(2009년 5월에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그러나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그동안 협회가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에 분산시켜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학생·교사·일반시민·취약계층 등 지역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직접 실시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년 단위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재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센터 간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대상은 청소년, 교사, 취약계층 등으로 다양하며 교육 형식도 방문교육, 직무연수, 경제캠프, 경제뮤지컬 공연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2009년 89,802명에서 2014년 119,929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인원이 가장 크게 늘었다(25,809명 증가). 전체 교육인원을 살펴보면 학생(575,727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취약계층(126,526명)이다.

<표 1> 지역경제교육센터 교육실적

(단위: 명)

교육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 계
교육인원	89,802	138,349	116,483	135,170	143,133	119,929	787,991
학생	75,968	109,519	84,328	98,727	98,347	78,875	575,727
교사	855	857	982	1,061	1,499	1,199	7,617
일반인	12,979	27,973	31,173	35,382	43,287	39,855	204,647
(취약계층)	(5,998)	(14,363)	(14,439)	(23,669)	(31,026)	(31,807)	(126,526)

2014년 말 한국경제교육협회가 해산되고, 2015년 말에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져 정부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경제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계적인 경제교육 흐름도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3)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 및 공급 현황

가. 분야별 경제교육 현황

2012년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12년 전국 학교 밖 경제교육기관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경제교육전문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민간단체의 총 3그룹으로 구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모든 경제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상업적 교육기관 제외).

조사된 168개 경제교육기관 중 공공기관은 94개(56.0%), 민간기관 및 단체는 74개(44.0%)였으며, 공공기관 중에는 공익단체가 44개, 공공기관이 20개이며, 민간기관 및 단체 중에는 민간단체 33개, 금융회사 31개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된 전체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총 365개로, 경제 183개(50.1%), 경제·금융 115개(31.5%), 금융 42개(11.5%) 순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표 2> 경제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균 개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공공 기관	정부기관	5	3.0	5	1.4	1.0
	공공기관	20	11.9	72	19.7	3.6
	지방자치기관	7	4.2	7	1.9	1.0
	지방공공기관	18	10.7	76	20.8	4.2
	공익단체	44	26.2	49	13.4	1.1
	소계	94	56.0	209	57.3	2.2
민간 기관 및 단체	금융회사	31	18.5	59	16.2	1.9
	민간단체	33	19.6	66	18.1	2.0
	시민단체	6	3.6	21	5.8	3.5
	언론기관	2	1.2	3	0.8	1.5
	연구기관	2	1.2	7	1.9	3.5
	소계	74	44.0	156	42.7	2.1
합계		168	100.0	365	100.0	2.2

자료: 한국경제교육협회(2012), 「전국 학교 밖 경제교육기관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경제교육을 받은 인원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402,416명(50.1%), 민간기관 및 단체 400,907명(49.9%)으로 총 803,323명이 경제교육을 이수했다.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기관 및 단체가 모두 응답을 한 결과는 아니지만, 민간부문의 경제교육이 급격하게 확대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은 공공부문의 경제교육 기능과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소비자 교육>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인, 저소득층 주부,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24,49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전면 개정 이후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이 155,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이후 연 2만여 명의 소비자를 교육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노인 55,928명, 저소득층 주부 13,144명, 결혼이민자 17,409명, 어린이·청소년·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취약계층 142,094명 등 총 228,575명이 소비자교육을 받았다.

<표 3> 공정거래위원회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단위: 회, 명)

교육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교육 회수	교육 인원	교육 회수	교육 인원	교육 회수	교육 인원	교육 회수	교육 인원	교육 회수	교육 인원
노인	336	26,263	206	15,508	82	6,960	87	7,197	711	55,928
저소득층 주부	72	4,453	112	6,201	19	1,091	21	1,399	224	13,144
결혼이민자	300	5,231	155	4,742	150	3,761	140	3,675	745	17,409
어린이·청소년·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취약계층	1,113	119,490	23	795	230	9,590	352	12,219	1718	142,094
합계	1,821	155,437	496	27,246	481	21,402	600	24,490	3,398	228,57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4.

<창업 교육>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매년 ‘청소년 비즈쿨’을 선정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①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지원 등 비즈쿨 운영, ②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③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직무 등 인프라 구축이 있다. 2002년부터 비즈쿨 지정·운영 1,362개교(829천 명), 비즈쿨 캠프 126회(11,693명), 창업동아리 6,505개(73,160명)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4> 청소년 비즈쿨 예산 및 지원학교 수

구분	2002~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122.3억 원	43.8억 원	50억 원	45억 원	50억 원
비즈쿨운영	803개교 (408천 명)	100개교 (72천 명)	124개교 (100천 명)	135개교 (116천 명)	200개교 (133천 명)
비즈쿨캠프	35회 (4,050명)	17회 (1,550명)	37회 (3,2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창업동아리	3,020개 (26,576명)	802개 (10,568명)	800개 (10,560명)	830개 (11,221명)	1,053개 (14,235명)

자료: 중소기업청(2015),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대학원 과정에서 창업학과는 2014년 14개 대학(16개 대학원)에서 24개 과정(석사과정 16개, 석·박사과정 8개)이 운영 중이다. 2014년 입학정원은 석사 367명, 박사 77명이고, 전담교수는 257명이다. 창업 강좌는 2014년 282개 대학에서 2,561개 창업 강좌가 운영 중이며, 2013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수강인원은 2014년 124,2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상별 경제교육 현황

①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아동·청소년

2013년 12월말 미취학학생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061개소이며, 이용 아동 수는 109,06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미취학아동은 3,714명이며, 초등학생이 80,31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KDI는 2014년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캠프를 시범 운영(3개 반)한 후 2015년 동계 방학에도 2개 반을 운영했다(동·하계 방학 중 연 2회 실시 예정). 2014년 8월 하계 방학에는 114명(3개 반)이 캠프에 참여하였고, 2015년 2월 동계 방학에는 62명(2개 반)이 참여하였다.

참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²⁾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5.7%에 그쳤고, “학교에서 경제를 언제부터 얼마 동안 배웠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1학년 2학기’에 배웠다는 학생이 52.9%로 가장 높았다.

2015년 3월 16일부터 4일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251개 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대상 설문조사(선착순 250명 대상)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동·청소년은 95.6%, 교사는 7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10명 이하일 때 경제교육 기회가 58.3%로 나타났는데, 이는 11~20명

2) 2014년 하계 캠프 참가자 중 초등학생(4~6학년)은 조사에서 제외하였고, 2014년 2기와 2015년 동계 캠프에 참가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규모 82.0%, 21명 이상 79.7%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기관의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다문화가족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³⁾은 2014년 기준 1,569,47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결혼 이민자는 281,295명에 이르고 있다.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는 191,328명으로 2012년도에 비해 22,745명(13.5%) 증가하였고,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전의 자녀를 둔 가정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을 제외하고 경제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센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지도교사의 경우도 월 평균 1회로 나타나 최소한의 의무교육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의 기본은 언어교육이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주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경제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여성들 중 상당수는 고국의 가족을 위해 취업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아 교육에 관심도 적고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③ 북한이탈주민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12월 기준 27,5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거주 중이다.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 약 70%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30대(29.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28.1%), 40대(16.3%)의 순이며, 10대 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12%를 차지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 고용률은 53.1%, 실업률은 6.2%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월평균 소득이 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 여부는 한국 사회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의 경제적 적응이 한국 사회 적응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생소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뤄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표 5>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87	1,503	2,224	1,918	1,161	433	308	8,314
여	590	1,781	5,378	6,105	3,242	983	867	18,946
계	1,177	3,284	7,602	8,023	4,403	1,416	1,175	27,080

주: 2014년 8월 입국자 기준.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하나원 교육 중 순수한 경제교육은 6시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할 때, 일반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축소판 형태로 경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또 국민이 가지는 의무를 다하게 하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④ 노 인

1970년 3.1%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 이르면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7년 14.0%로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35년의 고령가구는 전체 가구의 20.6%에서 40.5%로 증가하고, 독거노인가구도 7.4%에서 15.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2014년)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위인 스위스(24.0%), 3위인 이스라엘(20.6%)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재 각 지역경제교육센터, 금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서 노인 대상 경제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내용은 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의 경제교육과 베이비부머 등의 중·장년층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기대 수입을 고려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4) 이주미·김태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201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64-73.

⑤ 공무원

안전행정통계연보(20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은 998,940명이다. 행정부 공무원은 총 974,518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이 615,726명, 지방 공무원은 358,792명이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은 총 464,656명이다. 입법부 공무원은 3,993명, 사법부 공무원은 17,431명, 기타 헌법기관 공무원 등은 2,998명이다.

공무원 대상 경제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은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의 경제교육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2015 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전체 총 277개 과정에서 113,071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집합교육은 100개 과정 11,771명, 사이버 교육은 177개 과정 101,300명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포함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지식 Best 16’, ‘시장경제 바로알기’ 등의 경제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밖에도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커리큘럼 내에 경제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경제교육이 중요한 것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⑥ 언론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언론산업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기자직 종사자는 3,156개 매체사에 27,398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3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속 취재·보도·편집 관련 언론인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대학 이상 졸업자중 상경계열(경제·경영학) 전공자는 9.8%에 불과하다. 소속 부서별로 경제와 밀접한 경제·산업부의 경우도 상경계열 전공자는 11.2%에 불과하다.

언론인 대상 경제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KDI,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지만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언론은 경제정보의 주요 공급원이자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은 누구보다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경제의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⑦ 경제교육 강사

기획재정부가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경력과 전공, 연령대 등의 특성을 갖는 강사들이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분류해 보면, 외부전문가 46.7%, 내부 양성 강사 45.0%로 나타나 외부 강사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의 영역은 경제일반 41.2%, 창업진로 22.3%, 금융·자산관리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KDI가 2013년에 조사한 ‘학교 밖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자체적으로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1개 센터 중 8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양성과정을 이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75.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내부 양성강사 외에 상당수가 체계화된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교재나 커리큘럼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은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 양성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해외 경제교육 현황

해외 경제교육 흐름은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OECD 등 세계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별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교육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문맹은 개인의 경제생활에도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주요 국가들은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하기보다는 주관기관을 두고 측면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 CEE와 영국 PFEG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다만 주관기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정부지원금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가 경제교육을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1) 미국

경제교육법안(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은 미국 경제교육 관련 기본 법안으로 주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가 경제교육법안(EEE)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경제금융이해력 증진을 목표로 발의된 경제교육법안을 토대로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교육법안은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을 주관기관이 직접 진행하거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경

제교육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교육협의회(CEE)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871,067달러의 예산을 받아 경제교육법안에 근거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⁵⁾.

금융교육위원회(FLEC)는 공정·정확 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금융교육의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한다. 2006년 발표된 금융교육전략(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은 저축, 주택 보유, 은퇴 준비, 신용, 소비자 보호, 납세자 권리, 투자자 보호, 금융소외자(The Unbanked), 다문화계층, 청소년금융교육, 금융교육 성과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금융교육 총괄, 국제협력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금융교육전략은 금융교육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과 함께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강화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11년 발표된 금융교육전략(Promoting Financi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발표된 것으로 ①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증대, ② 핵심 금융역량 결정 및 통합, ③ 금융교육 인프라 개선, ④ 효과적인 금융프로그램 확인·강화·공유 등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내 경제교육 중추기관인 경제교육협의회(CEE)는 교사와 경제교육 연구자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CEE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금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최근 10년 동안 경제·금융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교육부,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등이 교사양성, 교재 및 정보제공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 OECD에서 논의된 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Education)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영국정부는 2007년 'Financial Capability: the Government's long-term approach'를 발표하고 2008년 독립된 연구(Thoresen Review of Generic Financial Advice)를 통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2010년 새로운 법안에 근거하여 금융자문기구(MSA)를 창설했다.⁶⁾

금융자문기구(MAS)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

5)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4), 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Final Report.

6) G20_OECD_Advancing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pp.285-294.

키고 금융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청(FSA)은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거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향상, 소비자보호, 금융범죄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및 결제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재원이 아닌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금융영업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으로 분리되었다. 금융감독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역량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or Financial Capability)의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3) 일본

일본 내각부는 2005년 경제교육 아젠다(Agenda of the Economic Education Summit)를 열어 경제금융교육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과 경제교육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을 ‘경제교육원년’으로 지정했다. 2005년 아젠다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 일본과 미국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 일본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경제교육 관련 정책 입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경제교육의 기본방향을 ‘경제학의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 습득과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경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하는 틀로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금융청(FSA)은 2005년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2007년 CCFSI(Central Council for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일본 경제금융과 관련된 변화가 학교교육과 사회제도 등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대체로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교육대상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학교제도교육 전담기관인 문부과학성과는 차별화된 교육보급의 주체로서 사회에서의 경제금융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했다. 금융청 웹사이트를 「가르쳐줘! 금융청」, 「여러분 일반인」으로 재편하고 경제교육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정보와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자원을 확대했다. 미성년자나 예비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실로 「가르쳐줘! 금융청」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청은 일본 경제금융교육의 중심기구로서 2013년 금융교육 스터디그룹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경제금융교육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청(CAA)⁷⁾은 소비지원행정을 일원화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일 기관으로 2009년 설립되어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정책 수립, 소비자생활을 위한 기반시스템 확립, 소비자 안전 보장, 부정기업 감시, 소비자교육 실시

7) <http://www.caa.go.jp/en/>.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제정된 소비자교육촉진법(Act on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에 따라 ‘소비자교육 증진 기본정책’과 소비자교육증진위원회를 개설했다.

4. 경제교육 평가 및 국민여론

1) 우리나라 경제교육 평가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위축 및 부실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사회에 진출해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애로를 겪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인 약 97%가 학교 밖(사회)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72%가 학교 밖 경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경제교육은 정부를 포함한 여러 경제교육 전문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문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학교 밖 경제교육을 공급하는 기관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조정·운영되지 않아 예산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상태이다. 실제로 2004년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과 민간 경제교육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가 발족되었으나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한계로 오래 존속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2009년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운영해 왔으나, 동 협회는 조직 운영상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순기능이 왜곡되거나 경제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많은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교육이 국내에서는 오히려 약화 현상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교육과 관련한 정부 예산의 삭감 및 축소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표준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경제교육 강사인력 양성 등의 기반 확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으로 새로운 주관기관을 선정해야 하나, 2015년 말에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되었다.

학교 밖 경제교육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경제교육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추진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교육 자문그룹이 부재한 것도 우리나라 경제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밖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경제교육 기관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목적도 조직의 이해와 연동되어 있어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하나 정부 내에서조차 관심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경제교육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조차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예산 삭감 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립성, 연속성, 전문성 등이 담보된 경제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칭)의 구성과 중앙 정부가 구심점이 된 경제교육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다.

2) 경제교육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KDI가 2015년 5월에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 국민들의 약 97%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은 약 28%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72%)들은, 그 이유에 대해 29.3%가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를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인근의 경제교육 기관이 없어서(23.3%)’라고 응답함으로써 경제교육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일반국민의 63.1%는 교육기관, 교육자료 등 현재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 반면, 단지 8.2%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85.0%)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다만, 일반국민은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에 대해 ‘민간기관의 경제적 지원(38.4%)’과 ‘강사양성, 교재개발 등 경제교육 기반조성(36.7%)’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반면,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실시(24.9%)’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경제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간접적인 역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교육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경제교육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교육 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교육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하고, 경제교육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교육 자문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경제교육이 정권이나 고위 정책담당자의 선호 여부에 따라 부침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 즉, 기관 및 강사에 따라 교재 및 연수프로그램이 다르거나 미흡하여 경제교육의 질적 격차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교육 강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부족한 경제교육 강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경제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44.4%는 경제 지식 입수 경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소 도시 혹은 도서지역 거주자 등 경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교육 수요자들에게 원격으로 각종 경제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제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를 토대로, 정부가 수행해야 하나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과감히 위임 혹은 위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 수요 파악 등을 토대로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등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필요시 정부와 민간 간의 경제교육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에는 단순히 경제교육 대상자들에게 경제이론 및 개념을 주입시키는 강사 위주의 경제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수법을 접목시켜 경제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프로젝트 기반학습(PBL)을 경제교육에 접목시키면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업, 소통 등의 능력을 추가로 배양할 수 있어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위주의 교육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보급에 힘써야 한다.